

“취업주부 근로소득세 탁아·파출부비 공제”

정무2장관실 자료집 논문

주부의 가사노동 가치의 평가 필요성을 제시하고, 이에 맞게 세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<주부의 가사노동 가치와 세제개선 방안>에 관한 연구가 나왔다.

정무2장관실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새 가족법의 정착을 위한 정책자료로 펴낸 <주부의...>에는 이화여대 가정관리학과 문숙재 교수의 ‘주부 가사노동 가치’, 외국어대 경제학과 최광교수의 ‘가족법 개정에 따른 세제개선 방향’ 등 2편의 논문이 실렸다.

문 교수는 △근로소득에서 탁아비나 파출부비 등의 비용을 뺀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△직장에선 취업주부를 위한 탁아시설 마련 △국가는 사회보장시설을 한 기업체에 특별 혜택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.

최 교수도 △재산분할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을 남녀가 동등하게 나누고 △혼인중 이혼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와 이혼할 때 분할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 폐지 △배우자 사별 특별공제제도 도입 △취업주부의 소득에서 탁아비·파출부비용을 뺀 뒤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

91.1.17

탁아시설 1백4곳 늘려

올해안 저소득 대상어린이 66% 수용

서울시는 올해 탁아시설 1백4군데를 늘려 기존시설 등 모두 3백8개 곳에서 3만1천명의 어린이를 보육하기로 했다.

서울시는 탁아시설이 계획대로 확충되면 저소득지역 탁아대상의 66%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.

서울시는 시설운영비 1백75억 원을 탁아소에 지원, 3만1천명

가운데 47%인 1만4천7백명의 저소득층 어린이는 보육료를 전액 면제하고 21%인 6천3백명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경감하고 나머지 32%인 1만명에게 일반보육료를 받을 방침이다.

서울시는 92년부터 94년까지 2백52개의 탁아시설을 확충해 기존시설 등 모두 5백60개 시설에서 5만명의 저소득층 어린이를 보육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

다.

간호조무사 원서접수

서울시는 오는 2월24일 오전 10시 송파구 풍납동 영파여고에서 치를 예정인 91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지방생들의 원서를 2월4~6일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 교부·접수한다. 582-4106.

91.3.30

여성 1천명넘는 사업장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

보사부 5월시행 예고

보사부는 29일 오는 5월부터 여성 노동자 1천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반드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·유아보육법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했다.

시행령안은 또 보육시설을 설

치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영·유아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80% 이상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금액은 노·사간 협의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.

이에 따라 여성 노동자 수가 1천명이 넘는 전국 1백52개 업체는 오는 5월부터 영·유아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.